

남녀의 출산의향, 출산 희망연령과 계획 자녀수의 영향 요인

Factors Related to the Willingness to have a Child, Parental Age at First Child's Birth, and
the Planned Number of Children among Men and Women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the willingness to have a child, parental age at first child's birth, and the planned number of children. The data came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from the Survey Research Center at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sample data set included 488 men and women between the ages of 18 and 49.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g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the value of marriage, the value of family succession, and willingness to increase spending on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willingness to have a child among unmarried and married participants without children. Second, among people willing to have a chil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parental age at first child's birth were gender, education, satisfaction with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the value of marriage, and the willingness to increase spending on education. Third, across the sample, the planned number of children was decided by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the value of childbirth, the value of marriage, and home ownership.

Overall, the value of marriage was the factor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The more a person agree with living with their partner before marriage, the more willing they were to give birth, the younger they were when they became a parent, and the more children they planned to have. The higher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the higher

* 주저자, 교신저자: 홍성희(hsh@kmu.ac.kr)

willingness to have a child, and the more children a participant planned to have. In addition, the more a participant was willing to increase spending on education, the higher their willingness was to have a child and the older they were when they became a parent.

Key Words : 출산의향(willingness to have a child), 출산 희망연령(the parental age at first child's birth), 계획 자녀수(planned number of children)

I. 서론

현대 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출산을 개인과 가족의 가치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를 적게 낳거나 낳는 것을 미루거나 또는 아예 계획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이연숙·김하늬·이정우, 2016).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였으며,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의 0.98명보다 더 떨어졌다(연합뉴스, 2020). 출산의향에 대한 최근 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에 의하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 중 약 28.9%가 향후 출산 의향이 없으며, 1명의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의 69.7%가 추가 출산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자녀의 이유는 주로 본인의 고연령과 난임이며, 1명의 자녀만 두겠다는 이유 또한 고연령과 자녀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등으로, 만혼으로 인한 만산이 적은 자녀수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만혼에 따른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부담 등이 출산의 당위성과 출산 자녀수를 낮추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저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산의향 뿐 아니라 출산 계획여부, 출산 연령, 원하는 자녀수 등을 동시에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녀수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더 분명하게 나

타난다. 이소영(2019)에 의하면 15세 이상 49세의 유배우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16명, 출생아수는 1.75명, 기대자녀수는 1.92명이었다. 이처럼 향후 출산까지 고려한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보다 적은 것은 기혼 여성이 원하는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과 자녀수 계획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기혼 부부의 연령과 현재 자녀수, 미혼남녀의 연령, 결혼의향 등이 출산의향 및 추가 출산의향,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취업률과 결혼연령 상승이 최근 출산의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 자녀수나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존 자녀수의 평균이 희망자녀수에 비해 낮은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으며, 특히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의 부담은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김승권 외, 2012).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소득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자녀 출산은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고소득이 오히려 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현주, 2006; 오유진·박성준, 2008; Becker & Lewis, 1973)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이 출산에 대한 결정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가치관으로 남아 선호관과 효도관의 경향이 비전통적일수록 희망자녀수를 출산할 확률이 높고(배광일·김경신, 2012),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가 강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이미란, 2010).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또한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며(김미정·정계숙·박희경, 2011), 미혼남녀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를 지향할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최효미, 201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출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확대되어 왔다. 기업의 출산전후휴가와 보육비 지원이 출산확률을 높이며(한영선·이연숙, 2015), 출산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많을수록 희망자녀수를 출산할 확률이 높음(배광일·김경신, 2012)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다. 한편 OECD 22개 회원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류연규, 2005), 보육료 지원 이용여부는 추가 출산의향에 부적 영향을, 육아휴직 이용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완과 채재은(2017)의 연구 결과, 그리고 송혜림(2016)의 심층면접에서는 현재 돌봄지원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지적된 결과는 한두 가지 세부 정책만으로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정책대상자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체감할 수준으로 감소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 주택관련 부담을 지목하며(Edema, 2012, 정의룡·서정옥, 2014), 보육비 및 세금감면과 같은 세금 지원, 현금 지원의 효과를 검토해왔다(이연숙 외, 2016; 이지나, 2019).

그동안 출산 관련 연구들은 출산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직간접적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해왔으나 독자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출산을 여성의 일과 역할로 보고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왔으며,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이탈, 소득 감소,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문제 위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이중 노동을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한계가 제기되면서 출산의향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당위성이 커졌다. 그 이유는 우선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연령층이 출산을 더 이상 부모와 자녀로 정형화된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를 이루기 위한 가족계획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동안 그 바탕에는 가족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성역할 가치관 역시 빠르게 달라진 사회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직업 선택과 역할의 폭을 넓혀온 여성들은 출산을 결혼에 따르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하거나 지연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출산이 여성의 독자적인 선택과 의사로 결정되기보다 부부의 미래 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장기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면 출산 시기와 자녀수를 포함하는 의사결정과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주 양육자와 양육비, 교육비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향후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애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혼자와 미혼자,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출산의향과 그에 따르는 출산연령과 자녀수를 계획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며, 그 과정에서 출산 의사결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의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출산 연령과 자녀수를 계획한다는 것은 출산의향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출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산의향과 출산희망연령, 계획자녀수에 대한 분석

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각 단계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단계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의 출산의향과 그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결혼을 앞둔 미혼자와 결혼 초기의 기혼자들이 결혼과 가족을 이루는 생애주기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설계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출산의향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파급영향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성과를 거둔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조사와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인구학에서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 속도를 미래 인구 및 연령 구조 측면에서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가임기 여성 인구의 비중 감소로 이어져 향후 출산율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도 인구 감소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우해봉·한정림, 2018). 특히 만혼화 현상은 여성의 가임기를 축소시켜 출산 가능성과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임신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연령에 따른 출산이행 빈도가 다르나(고선장, 2016), 만혼으로 인한 고연령의 영향이 다른 요인과 같이 작동하면서 출산율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의향이 낮으며, 출산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여성들이 훨씬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연숙 외

(2016)가 조사한 남녀대학생의 가치관과 출산계획 조사에 의하면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가족가치관의 수준이 낮고 자녀출산의도도 낮았으며, 최효미(2017)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결국 저출산 현상은 인구구조 뿐 아니라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출산은 장기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요하며,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다. 개인의 출산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학이론으로 Becker(1993)의 신가계경제학은 여성임금을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출산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본다. 가계의 효용함수는 자녀와 다른 가정생산물을 포함하는데, 가계는 예산 제약 하에서 자녀에 대한 소비와 가정생산물의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총소득과 자녀 가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asterlin(1973)의 상대소득 가설은 개인의 출산력이 절대소득보다는 소속된 준거집단 내에서의 상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며 잠재적 가구주가 원하는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과 출산을 하는데, 생활양식의 취향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형성된다고 본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비해 자신의 소득이 낮아 취향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두 가지 이론은 공통적으로 자녀의 출산 및 양육비용에 대한 투자와 다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비교하여 출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정성호, 2010; Jutta, 2010; William, 2011)에 의하면 여성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녀 출산과 양육의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는 자녀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산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불안정, 양육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 변화가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학적 변인과 경제적 변인들이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대안으로 심리적 변인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자녀가치관은 미혼자의 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마미정, 2008; 최효미, 2017), 추가 출산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이완·채재은, 2017). 또한 가족원과의 관계는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결정하며(Carmichael & Whittaker, 2007),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도 추가로 자녀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Newman, 2008).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부부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며(이형민, 2012),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기대자녀수가 높았다(배광일·김경신, 2012; 김미정 외, 2011).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출산장려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확충되어 왔다.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과 제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후속 출산의향을 높일 수 있다(김명원·강민주, 2011; 최지훈·안선희, 2018).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부담감을 갖게 하여 자녀 낳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신윤정, 2017). 국가와 기업이 자녀 출산 이후 양육과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활성화된다면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지연하거나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출산의향 및 희망 출산연령, 자녀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특성

성별은 결혼관과 결혼의향, 자녀관을 통해 출산 의식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녀의 필요성이나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며(진미정·정혜은, 2010), 미혼 남성과 여성의 자녀 출산의사와 희망 자녀수에 차이가

있었다(김혜정, 2010). 이소영 외(2018)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의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 평균은 1.88명, 2.03명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각각 1.83명, 1.87명으로 남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희망 자녀수가 여성에 비해 약간 많았다. 2018년 평균 희망자녀수를 2015년과 비교하면 특히 여성의 희망자녀수가 남성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추후 출산계획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물학적 연령은 출산의향 및 자녀수계획에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일 것이다. 이소영 외(2018)의 조사에서 15-49세의 출산이 완결된 유배우 여성의 출산 중단 이유로는 고연령이 20.1%로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향후 자녀출산계획은 단일 이유로 보면 여성의 연령과 가장 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영선과 이연숙(2015)에 의하면 15세 이상 49세의 가임기 여성들의 연령과 출산확률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며, 일정 연령까지 출산확률이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결혼기간 5년 이내의 20세에서 44세의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을 분석한 김주희와 고선강(2015)도 약 31.7세까지는 출산의향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비선형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한영선과 이연숙(2015)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확률의 정적 관계를, 이승주, 이소민과 문승현(2017)은 18세 이상 49세 성인여성의 학력과 출산의사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전은주(2015)는 20세에서 49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선강(2016)은 20-30대 기혼여성의 공교육기간이 길수록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정성호(2012), 김주희와 고선강(201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별출산력과 출산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만족도와 출산의향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와 출산의향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김미정 외(2011)의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대자녀수가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존재와 양육으로부터 부모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은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출산의향과 자녀수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는 출산의향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과 최원석(2012)은 남녀 간의 노동분담 태도가 평등하거나 직장가 가족의 두 생활영역에서 역할 간 갈등이 적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했다. 최지훈과 안선희(2018)의 연구에서 남편의 자녀 돌봄 참여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의향의 확률이 높았다.

2) 경제적 자원

여성의 출산 결정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업여성이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비취업여성과 비교하여 더 크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된다(고선강, 2016). 한영선과 이연숙(2015)의 연구에서 여성의 취업은 생애 전체 출산, 첫 출산, 두 번째 출산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여성의 출산확률을 감소시키고 출산을 지연시키는 변인이었다. 이승주 외(2017)의 연구에서도 직장 여성의 향후 출산의사가 직장이 없는 여성보다 적었다. 그러나 김주희와 고선강(2015)의 연구에서는 20세~44세 사이의 결혼 5년 이내 여성의 취업여부는 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효미(2017)의 연구에서는 미혼 청년층 취업자의 출산의향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취업이 출산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여러 현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수반하며, 주택가격은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의룡·서정욱, 2014). Edema(2012)는 일본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은 출산 억제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Dettling & Kearney(2011)는 미국의 광역도시권역(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에서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출산율 상승을 초래하지만, 그 효과는 주거소유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고 하였다. 주택가격이 10,000달러 상승함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출산율은 2.1% 상승한 반면 비주택소유자의 출산율은 0.4% 감소하였다. 김주희와 고선강(2015)의 연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신혼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소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았다. 가계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자녀양육비, 교육투자, 주택 소유를 위한 저축 등에 소득을 배분해야 하므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는 자녀출산 및 자녀수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의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소득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액이나 소득유무의 대체변수로 가계경제상태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가계경제에는 부모의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수준이 반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자녀출산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인식한 출산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가치관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가부장권, 결혼 및 동거, 이혼에 대한 의식, 부부관계, 부부역할 및 분담, 자녀 가치관 등 가족생활과 가족원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가치관으로 그 영향이 출산의향 및 자녀수에 반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을 가부장제 가치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 가치관으로 세분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계혈연의 가족, 가통의 계승과 발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의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란(2010)의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가 아들인지 여부가 둘째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부계 중심의 가계계승에 대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의 결혼가치관에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결혼 규범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합법적 혼인을 거치지 않은 이성애적 결합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거에 수용적인 태도가 나타났다(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 이소영 외(2018)의 혼인을 전제한 혼전 동거의식 조사에서 반대보다 찬성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은 자녀관, 자녀가치, 자녀 필요성 등으로 정의, 측정되고 있다. 이완과 채재은(2017)은 자녀가치관 중 도구적 가치관이 정서적 가치관보다 추가출산의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추가 출산의 경우 최초 출산보다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등의 기회비용을 더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지나(2019)는 기혼취업여성이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가치에 찬성할수록 출산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효미(2017)는 결혼 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녀 필요성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출산이 결혼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며, 자녀 필요성이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진숙과 최원석(2012)은 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가진 여성의 경우 일과 가족생활 양립으로 인한 갈등이 클 것이고, 결국 일보다는 출산을 통제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최효미(2017)는 맞벌이를 할 경우 집안일 분담에 대해 미혼남성이 80%대의 높은 동의도를 보인 한편 미혼여성은 90% 이상으로, 양성 평등적 역할 분담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더 부정적인 견해를 통해 남녀 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성의 출산 기피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4) 정책

정책 요인인 정책 우선순위와 정부의 교육분야 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 출산정책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고신강(2016)의 연구에서는 직장의 탄력근무제 또는 시차출퇴근제가 35세 미만의 취업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였다. Edema(2012), OECD(2011)의 보고서는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공적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교육비가 높아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정의룡과 서정옥(2014)은 OECD 19개 국가에서 교육과 주택 부문이 출산을 제고에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으로 보고하면서 교육과 주택부문에 대한 공적부문의 투자를 통해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지나(2019)의 연구에서는 기혼취업 여성이 세금으로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데 찬성할수록 출산자녀수가 많았다. 이연숙 외 (2016)의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세금감면혜택을 준다면 출산 또는 자녀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출산과 양육을 정부의 지출 확대, 세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그 실효성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미혼 및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출산의향과 출산을 희망하는 연령, 그리고 일생 동안의 자녀수 계획 등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출산의향은

미래 시점에서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출산 시기와 자녀수 계획이 뒤따르는 결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향을 출산연령 결정, 자녀수 계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설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각 단계에서 출산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무자녀 기혼 및 미혼 남녀의 출산의향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둘째, 출산의향이 있는 무자녀 기혼 및 미혼 남녀의 출산 희망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기혼 및 미혼남녀의 총 계획 자녀수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첫째, 출산의향으로,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장래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가변수화 하였다. 둘째 희망 출산연령으로, 출산의향이 있는 대상자가 첫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연령을 측정하였다. 셋째 계획자녀수로, 모든 대상자가 현재 자녀를 포함하여 평생동안 계획하는 총 자녀수를 의미한다. 측정된 계획 자녀수는 4명까지 분포되었으나 2명 이상, 1명, 0명으로 분류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경제적 자원, 가치관, 정책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족관계만족도, 이상적 가족상을 선정하였다. 이상적

가족상은 부부가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두 가지를 평등하게 분담하는가로 정의하고, ‘부부가 동일한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사와 양육을 평등 분담하는 가족’, 또는 ‘아내가 남편보다 직장생활을 덜 하고 가사 양육을 더 분담’하거나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가족’의 두 가지로 가변수화 하였다. 둘째, 경제적 자원 변수는 취업상태, 본인을 포함한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 주택소유상태이다. 셋째, 가치관 변수는 가부장제 가치관,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으로 세분화하였다. 가부장제 가치관은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가치와 가계계승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결혼가치관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혼인을 거치지 않은 동거에 대한 인식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자녀필요성(자녀가치관 1)과 인공유산에 대한 인식(자녀가치관 2)으로 측정하였다. 성역할 가치관은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넷째, 정책변수는 두 가지로, 정책우선순위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어린이 정책 또는 노인정책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교육 분야 지출 확대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앞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어야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 조사대상자는 18세 이상 1,052 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의 가임기를 15세 이상 49세까지로 규정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소영외, 2018)를 참고하여 18세 이상 49세의 성인남녀 중 출산의향에 응답한 488명을 선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출산의향	장래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0= 아마도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출산희망연령 계획 자녀수	언제쯤 첫 아이를 낳을 생각이십니까? ____ 세 (기존 자녀를 포함하여) 평생 총 몇 명의 자녀를 갖고자 계획하십니까? 0= 0 명 1= 1명 2= 2명 이상
독립변수	
개인적 특성 :	
성별	1= 남성 0=여성
연령	1= 10-20대, 0= 30대 이상
교육수준	교육년수
가족관계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 1=전적 불만족 4=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7= 전적 만족
이상적 가족상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부부가 동일한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사와 양육 또한 평등 분담하는 가족, 0= 아내가 남편보다 직장생활을 덜 하고 가사와 양육을 더 많이 분담하는 가족 또는 남편만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하는 가족
경제적 자원 :	
취업상태	현재 취업 여부 1=취업 0=미취업
주택소유상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1=자기 집 0=전세, 월세, 무상
가계경제상태만족도	가계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1=매우 불만족 3=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5=매우 만족
가치관 :	
가부장제 가치관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1=매우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7=매우 반대
결혼가치관(동거 인식)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1=전적 반대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찬성
자녀 가치관1(자녀 필요성)	여성이 충분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 1=전적 찬성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반대
자녀가치관2(인공유산에 대한 인식)	부부가 더 이상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으면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 있다 1=전적 반대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찬성
성역할 가치관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1=전적 반대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찬성
정책 :	
정책 우선순위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선순위에 대한 두 가지 의견 중 귀하의 의견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1=어린이 정책이 노인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0=노인정책이 어린이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및 기타
교육 분야 지출 확대	여러 가지 정부의 지출 분야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1=훨씬 더 줄여야 3=지금만큼 그대로 5=훨씬 더 늘려야

첫 번째 종속변수인 출산의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출산의향의 응답자는 현재 미혼이거나 무자녀 기혼자로, 전체 표본 488명 중 유자녀 기혼자를 제외한 259명이다. 둘째, 출산 희망연령은 출산의향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산의향이 있다고 한 171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 154명의 자료를 중회귀분석하였다. 셋째, 계획자녀수의 결정요인은 전체 표본 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426명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변수별 신뢰수준 95%, 또는 90% 수준에서 판단하였으며, 분석은 SPSS Win 25.0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이며, 연령대 별로는 30대 이상이 64.8%로 훨씬 더 많았다(표 2 참조). 이상적 가족상으로 '부부가 직장과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2.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아내가 전담하거나 더 많이 분담하는 가족'이라고 한 대상자도 18%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어린이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64.3%로, 노인정책이라고 한 응답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가족관계만족도는 7점 중 5.49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을 보였다. 가계경제상태만족도는 5점 중 3.15로 중간 수준인 3을 약간 상회한다. 가치관 중 가부장제 가치관은 5.05로 가계계층의 가치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혼가치관으로 동거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4보다는 높고, '약간 반대'인 5보다는 낮은 수용수준을 보였다. 자녀가치관으로서 자녀필요성에 7점 중 3.47로 '약간 찬성'하는 수준이었다. 정부의 교육분야 지출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은 '다소 더 늘려야 한다'에 해당하는 4

를 약간 상회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출산의향이 있거나 또는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집단으로 이들이 정부의 교육 분야 지출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자녀 교육을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거나 자녀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출산의향에 응답한 미혼자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 259명 중 출산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6.0%이며, 출산의향이 없는 응답자도 34.0%에 달한다. 첫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연령은 34.2세였다. 계획자녀수, 즉 일생 동안 갖고자 하는 총 자녀수가 1명인 대상자는 14.8%, 2명 이상이 61.5%이었다.

2. 출산의향 결정 요인 분석 : 무자녀 표본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기혼 대상자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의향의 결정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표 3 참조). 개인적 특성 중 성별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출산의향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남녀의 출산의향 비교한 일부 연구(진미정·정혜은, 2010; 김혜정, 2010; 이연숙 외, 2016)에서는 여성의 출산의향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대상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연령에 따라 3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에 비해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출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해온 것(김주희·고선강, 2015; 고선강, 2016)과 차이가 있다. 한영선과 이연숙(2015)이 기혼여성의 연령과 출산의향을 비선형적인 관계로 보고한 것이나 본 연구의 첫 자녀 출산 희망연령이 34.22세인 것과 관련시켜 볼 때 출산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30대 초중반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88)

변수	집단	빈도(백분율)
성별	여성	252(51.6)
	남성	236(48.4)
연령	18-29세	172(35.2)
	30-49세	316(64.8)
이상적 가족상	부부 평등분담	355(72.7)
	아내 전담 또는 더 분담	89(18.2)
	결측값	44(9.1)
취업상태	미취업	186(38.1)
	취업	302(61.9)
주택소유상태	비소유	236(48.4)
	소유	245(50.2)
	결측값	7(1.4)
정책우선순위	노인정책	154(31.6)
	어린이정책	314(64.3)
	결측값	20(4.1)
출산의향	없다	88(18.0)
	있다	171(35.0)
	결측값	229(46.9)
자녀수 계획	0명	87(17.8)
	1명	72(14.8)
	2명 이상	300(61.5)
	결측값	29(5.9)
변수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34.22(9.54)
교육수준(년)		14.92(2.19)
가족관계만족도(7점)		5.49(1.15)
가계경제상태만족도(5점)		3.15(1.06)
가부장제 가치관(7점)		5.05(1.50)
결혼가치관 (7점)		4.59(1.36)
자녀가치관1(자녀 필요성) (7점)		3.48(1.46)
자녀가치관2(인공유산에 대한 인식) (7점)		4.42(1.55)
성역할가치관 (7점)		2.94(1.38)
교육분야 지출 확대(5점)		4.11(.79)
출산희망연령		634.22(4.97)

출산 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이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이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Carmichael & Whittaker, 2007),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이 추가로 자녀를 갖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Newman(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원만한 가족관계와 이를

〈표 3〉 출산의향 결정 요인: 무자녀 표본

(n=259)		
변수(준거집단)	B	Exp(B)
개인적 특성		
성별(여성)	-.632*	.531
연령(30대 이상)	-1.185**	.306
교육수준	.075	1.078
가족관계만족도	.287*	1.333
이상적 가족유형(아내의 가사 전담 또는 더 분담)	.517	1.677
경제적 자원		
취업상태(미취업)	-.317	.728
주택소유상태(비소유)	-.453	.636
가계경제상태만족도	-.003	.997
가치관		
가부장제 가치관	-.276*	.758
결혼가치관	.407*	1.502
자녀가치관 1	.108	1.114
자녀가치관 2	.078	1.081
성역할가치관	-.232	.793
정책		
정책우선순위(노인정책)	.188	1.207
교육 분야 지출 확대	.523*	1.688
상수	-2.587	
-2 Log likelihood	211.234	
Nagelkerke R ²	.287	
χ^2	48.15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유지하려는 경향은 향후 출산의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가치관 변수 중 결혼가치관이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동거에 수용적인 인식을 보일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가부장제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이미란(2010)이 기혼여성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가 강할수록 둘째 자녀 출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결과

에 대해 부계 중심의 가족주의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책 변수 중 정부의 교육 분야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사를 보일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정부의 교육 투자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훨씬 더 늘리는 것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교육 지출이 충분하지 않거나 과도한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다른 변인들이 동일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적은 20대 이하 집단에 비해 30대 이상 집단이,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가부장제 가치를 수용할수록, 동거에 수용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질수록, 교육 분야 지출 확대에 동의할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3. 출산의향자의 출산희망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산의향이 있는 미혼자와 무자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첫 자녀 출산 희망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 간 상관관계와 VIF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출산 희망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연령을 제외한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취업상태, 결혼 가치관, 교육 분야 지출 확대가 각각 출산 희망연령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다(표 4 참조).

출산의향을 가진 대상자 중 남성이 희망하는 첫 자녀 출산 연령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이는 남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희망연령이 높았다. 이는 고선강(2016)이 20-30대 기혼 직장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출산의향을 갖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것이나 한영선과 이연숙(2015)의 연구 결과 중졸 이하의 학력은 대학 이상의 학력과 비교할 때 출산확률을 낮췄던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표 4〉 출산희망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자녀 표본 (N=154)		
변수(준거집단)	B	β
개인적 특성		
성별(여성)	2.507	.247**
교육수준	.399	.166*
가족관계만족도	-.418	-.106
이상적 가족유형(아내의 가사 전담 또는 더 분담)	-.997	-.074
경제적 자원		
취업상태(미취업)	1.738	.181*
주택소유상태(비소유)	-.991	-.103
가계경제상태만족도	-.800	-.178*
가치관		
가부장제가치관	.177	.050
결혼가치관	-.607	-.170*
자녀가치관 1	.390	.108
자녀가치관 2	.212	.064
성역할가치관	-.199	-.056
정책		
정책우선순위(노인정책)	-.350	-.034
교육 분야 지출 확대	.963	.142*
상수	27.737	
R ² (Adj-R ²)	.230(.141)	
F 값	2.577**	

* $p < .10$, ** $p < .05$, *** $p < .01$

취업상태에 따라 취업자의 출산 희망연령이 비취업자에 비해 높았다. 이는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비취업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한편 취업자가 취업 후 경력 개발이나 유지를 위해 자녀 출산을 늦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이삼식과 최효진(2014)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여성은 25-29세에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비취업 여성은 같은 시기의 출산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취업여성의 출산연령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계경제상태만족도가 낮을수록 출산희망연령이 높았다. 가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출산을 연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자의 출산 희망연령이 비취업자에 비해 높고, 가계경제상태만족도가 낮을수록 출산희망연령이 높은 결과에서 취업자가 직업 적응과 경제적 안정 후 출산하려는 태도와 가계경제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경제적 자원 변수가 출산 희망연령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취업과 만족스러운 경제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출산을 늦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요인 중에서는 결혼가치관이 출산희망연령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동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출산 희망연령이 높았다. 이는 동거보다는 결혼 제도를 수용할수록 출산 희망연령이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책 요인 중 교육분야 지출 확대에 수용적일수록 출산 희망연령이 높았다. 아직 자녀를 두지 않았지만 출산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향후 자녀 교육비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결국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지연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4. 계획 자녀수의 결정요인 : 전체 표본

계획자녀수의 분석대상자는 미혼자 및 자녀를 두었거나 두지 않은 모든 기혼자인 전체 표본으로, 18세 이상 49세의 성인남녀 488명 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426명이다. 계획자녀수는 0명, 1명, 2명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0명인 집단을 참고범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계획자녀수가 0명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1명인 집단에는 성별과 가족관계만족도, 자녀가치관1(자녀필요성)이 유의한 변인이었다(표 5 참조).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또 자녀

필요성에 반대할수록 계획 자녀수가 1명일 확률이 높았다. 계획자녀수가 0명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2명 이상인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관계만족도, 주택소유상태, 자녀가치관1(자녀 필요성), 결혼가치관, 정책우선순위와 교육분야 지출 확대였다.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자녀 필요성에 반대할수록, 동거를 수용하는 결혼가치관을 가질수록, 주택소유자가 비소유자에 비해 자녀수를 2명 이상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정책우선순위를 어린이정책보다 노인정책에 두는 집단이, 그리고 교육 분야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할수록 자녀를 2명 이상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참고 집단과 비교할 때 계획자녀수 1명인 집단과 2명 이상인 집단에서 가족관계만족도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가 각각 유의한 변수였다. 가족관계만족도가 계획 자녀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결혼행복감 등이 출산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호주 성인 남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배우자 만족도, 기존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이

〈표 5〉 계획 자녀수 결정 요인: 전체 표본

(N=426)

변수(준거집단)	계획자녀수(참고집단: 0)		계획자녀수 1명		계획자녀수 2명 이상	
	B	Exp(B)	B	Exp(B)	B	Exp(B)
개인적 특성						
성별(여성)	-.964 [*]	.381	-.266	.766		
연령(30대 이상)	-.589	.555	.227	1.254		
교육수준	-.013	.987	-.077	.926		
가족관계만족도	.345 [*]	1.412	.342 [*]	1.407		
이상적 가족유형(아내가 가사전담 또는 더 분담)	-.346	.708	-.338	.713		
경제적 자원						
취업상태(미취업)	.610	1.841	.173	1.189		
주택소유상태(비소유)	.036	1.036	.645 [*]	1.905		
가계경제상태만족도	-.077	.926	.018	1.018		
가치관						
가부장제가치관	.157	1.170	-.085	.919		
결혼가치관	.264	1.303	.304 [*]	1.355		
자녀가치관 1	.288	1.334 [†]	.369 [*]	1.446		
자녀가치관 2	-.101	.904	.030	1.031		
성역할가치관	.189	1.208	-.032	.969		
정책						
정책우선순위(노인정책)	.027	1.028	-.636 [†]	.529		
교육 분야 지출 확대	.150	1.161	.331 [†]	1.392		
상수		-4.305				-1.989
-2 Log likelyhood			578.929			
Nagelkerke R ²			.229			
x ²			80.717 ^{***}			

[†]p<.10, ^{*}p<.05, ^{***}p<.001

후 출산의 관련성을 분석한 Parr(2010, 정선영, 2017에서 재인용)는 남녀 모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남성의 경우 배우자 만족도, 기존 자녀 관계 만족도와 이후 출산과 관련성을 보고했다. 이진숙과 최원석(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행복감이 출산계획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을 수용하지 않는 가치를 보일수록 계획자녀수가 0명보다는 1명 또는 2명 이상일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필요성을 수용할수록 더 많은 자녀를 계획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출산 결정이 자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녀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자녀수를 결정하는 계획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다. 즉, 자녀가치관은 개인의 가치 지향에 따른 선택이지만, 출산은 부모 자녀관계가 기본이 되는 가족개념과 출산 부담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문제로 가족 차원에서 결정하는 이원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로 대상자가 미혼자와 기혼자, 기혼자 중에서도 자녀를 이미 출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수 계획은 앞으로의 출산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계획일 수도 있다.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 시점도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함축한 결과 자녀수 계획이 가치 차원과 다른 양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18세 이상 49세의 성인남녀의 출산 관련 의사결정과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미혼자 및 무자녀 기혼자의 향후 출산의향, 출산의향이 있는 대상자의 출산 희망연령, 그리고 미혼자 및 기혼자의 계획자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유의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미혼자 및 무자녀 기혼자의 향후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가치관, 정책요인의 일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경제적 자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 출산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향후 출산의향에 경제적 자원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가계총소득 또는 여성의 임금 변화에 의한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에 따라 출산을 결정한다는 Becker(1993)의 이론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가계경제적 변수인 소득을 활용하지 못했으므로 비교에 한계가 있다. 한편 출산 희망연령에는 경제적 자원의 세 가지 변수 중 취업상태와 가계경제상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며, 두 변수의 영향력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미루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출산의향을 가진 응답자들도 출산연령을 취업 후 만족할만한 가계경제상태에 이를 때까지 미룬 결과 출산 희망연령이 높아지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와 대조되는 한편 출산의향을 가진 집단에서는 출산연령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자의 출산희망연령이 비취업자에 비해 높고, 가계경제상태만족도가 낮을수록 출산희망연령이 높아지는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출산의향자들에게 직업과 경제적 안정이 출산보다 더 우선되며,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출산연령을 늦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출산에 따르는 결정이 출산 전후의 경제적 자원관리를 고려해 계획된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은 출산 의향, 출산 희망연령, 계획자녀수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고, 자녀수를 1명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또 남성의 첫 자녀 출산희망연령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출산과 관련된 의향과 결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관계만족도

가 출산의향 및 계획자녀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 특히 자녀수를 0명보다 1명 또는 2명 이상 계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자녀출산에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이 출산을 결정하며(Carmichael & Whittaker, 2007)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고(Newman, 2008),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기대하는 자녀수가 많다(배광일·김경신, 2012)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송혜림(2016)의 심층면접에서도 기혼여성의 원가족에서의 경험, 형제자매관계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근 무자녀를 선택하는 기혼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족배경에서 축적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은 여전히 출산의향과 자녀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자에게는 성장과정에서 보아온 부모의 부부관계, 자신과 부모의 관계, 가족 내에서 부모 또는 자녀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이 출산 관련 의사결정에 선행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앞서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 가치관은 출산의향, 출산 희망연령, 그리고 계획자녀수에 일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동거에 수용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질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출산을 희망하는 연령이 낮아 빠른 출산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를 2명 이상 계획하는 확률이 높아 전반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출산의향과 출산희망연령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계획자녀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필요성에 가치를 두지 않을 때 계획자녀수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녀를 1명 또는 2명 이상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이

는 자녀필요성이 개개인이 선택하는 가치지향성인 반면 자녀수를 계획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과 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부장제 가치는 출산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출산을 설명해온 인구학이나 경제학에서 제시했던 변수 이외에 가치관 요인이 가까운 미래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출산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책 요인이 출산 관련 의사결정에서 비중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정책우선순위가 계획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한편 교육 분야 지출 확대는 출산의향과 출산희망연령, 그리고 계획자녀수의 각 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교육 분야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 자녀를 2명 이상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선행연구(Edema, 2012; 정의룡·서정욱, 2014)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교육비 부담이며, 교육에 대한 공격 투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출산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확대된다면 원하는 자녀수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를 출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맥락이다. 따라서 출산 적령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교육비의 부담이 크며, 이들은 자신이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정부가 공교육에 지출을 확대할 때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송혜림(2016)은 기혼여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문제로 들고 있으나 내면으로는 사교육을 우려하는 현상에 대해 공교육 활성화가 출산 관련 정책과 직접 관련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남녀의 출산 문제를 출산의향과 출산희망연령, 계획자녀수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사

결정과정으로 접근하였다. 각 단계에서 개인과 가족의 특성, 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 정책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통해 각 요인들이 어떤 단계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혼자 및 미혼자의 출산에 대한 결정이 단순히 자녀 출산여부의 문제이기 보다는 출산 시기와 자녀수 계획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되며, 복합적인 의사결정과정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양육은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 내 집 마련 등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관련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거나 반대로 소비하는 시기와 출산,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조직하며, 부부의 취업노동과 양육의 역할을 분담하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의 배분 과정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결혼 가치관은 출산의향, 출산희망연령, 그리고 계획자녀수의 모든 의사결정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으로서 규범적 결혼에 대한 인식과 동거에 대한 인식의 향후 변화 양상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기혼 및 미혼의 남녀로 확대하여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결정을 비교하는 분석을 시도했으나 유효표본수가 적어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출산의향과 희망연령, 계획자녀수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남성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출산의사결정을 비교 분석한다면 출산을 저하의 원인을 찾고 남성 또는 여성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수준이 낮은 것은 남성 개인의 성역할 가치관 또는 경력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유명무실한 제도의 한계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도적 문제로 밝혀진다면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활

용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 자원이 출산에 중요한 요인이나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미혼자들이 비취업 상태로 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자원 상태와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 예를 들면 여성의 출산 전후로 발생될 수 있는 취업 중단, 이직 등 직업 변동과 그에 따른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고 입증하는 연구가 시도된다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저출산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16).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기혼 직장 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연령 집단 별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151-171.
- 2) 김나영(2011). 미혼남녀의 출산관련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26, 5-23.
- 3) 김명원 · 강민주(201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8), 25-35.
- 4) 김미정 · 정계숙 · 박희경(2011). 20-30대 유자녀모의 심리적 · 사회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1-18.
- 5) 김승권 · 박종서 · 김유경 · 김연우 · 최영준 · 손창균 · 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6) 김주희 · 고선강(2015). 신혼기 기혼여성과 부모간의 자원이전과 출산의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27-49.
- 7) 김혜정(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미혼남녀 대상.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33-261.
- 9) 마미정(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75-116.
- 10) 박현주(2006).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배광일·김경신(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3(3), 239-266.
- 12) 송혜림(2016).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출산태도와 돌봄지원정책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67-93.
- 13) 신윤정(2017).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 14) 연합뉴스(2020. 2. 26) 4년간 185조원 썼는데... 출산율 1.13명→0.92명 ‘역주행’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94300002?input=1195m>
- 15) 오유진·박성준(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15(1), 91-102.
- 16) 우혜봉·한정림(2018).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보건사회연구 38(2), 9-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7) 유계숙·강민지·윤지은(2018). 청년층의 가족 개념과 가치: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18)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 19) 이삼식·최효진(2014).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 이소영·김은정·박중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1) 이소영(2019). 자녀 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5-46.
- 22) 이승주·이소민·문승현(2017). 부모 자녀의 이중부양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 현 자녀수와 향후 출산의사의 관계에서 노부모 동거 부양부담의 조절효과 분석, 가족과 문화, 29(3), 111-138.
- 23) 이연숙·김하늬·이정우(2016).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109-140.
- 24) 이완·채재은(2017).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65-78.
- 25) 이지나 (2019). 기혼취업여성의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9), 659-667.
- 26) 이진숙·최원석(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5-30.
- 27) 이형민(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 28) 진은주(2015). 기업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제공정도가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장-가정갈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정선영(2017). 삶의 만족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과 문화, 29(1), 105-127.
- 30) 정성호(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49(1), 69-91.
- 31)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

- 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32) 정의룡 · 서정욱(2014). 국가별 출산율에 미치는 정책요인 분석: OECD 국가들에 대한 퍼지셋 분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461-478.
- 33) 진미정 ·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34) 최지훈 · 안선희(2018). 가족친화제도와 남편의 자녀 돌봄 참여가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75-85.
- 35)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17 공동출판 학술대회 자료집, 49-55.
- 36) 한영선 · 이연숙(2015), 여성취업과 일 · 가정양립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1), 49-66.
- 37) Becker, G. S. and H. G. Lewis,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279-288.
- 38) Becker, G S.(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39) Carmichael, G. A. and A. Whittaker(2007). Choice and circumstance: Qualitative insight into contemporary childlessness in Austral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2), 111-143.
- 40) Dettling, L. J. & Kearney, M. S. (2011).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NBER Working Paper No. 17485.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41) Easterlin, R. A. (1973).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s. in Family Economic Behavior, Eleanor B. Sheldon, ed. Philadelphia: Lippincott.
- 42) Edema, W. (2012). Setting the Scene: The Mix of Family Policy Objectives and Packages across the OEC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487-498.
- 43) Jutta, M. J. (2010). Children and the timing of women's paid work after childbirth : A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4), 1008-1021.
- 44) Newman, L(2008). How parenthood experiences influence desire for more children in Australia: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5(1), 1-27.
- 45)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1787/9789264098732-en>.
- 46) William, E. E. (2011). Career interruptions following childbir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5(2), 255-277.

- 투 고 일 : 2020년 03월 20일
- 심 사 일 : 2020년 04월 14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05월 18일